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문화방송 노조

226호

2017년 7월 5일

발행인 김연국 / 편집인 허유신 /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무단협 1631 일째
지명파업 458일째



‘사상 최악의 노동탄압’ MBC 경영진의 범죄 행위는?

MBC 경영진이 자행해 온 최대의 노동탄압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관 8명을 투입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절차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 기소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실무 간부와 노무 담당사원들까지 형사처

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MBC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들이 있고, 법원·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 징계, 부당 전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전·현직 사장 김재철·안광한·김장겸과 관

련 실무자들의 위법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다.



01 조합 가입·파업 참가 조합원의 불이익

2012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 등에 소송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

당 근로자를 해고·징계하거나 부당전보, 승진누락 등 불법적 불이익을 가한 행위

02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보직자 또는 보직 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중용, 조합 탈퇴 거부자에 대한 인사 보복 조치 ▲회사 임원과 간부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 ▲노보 배포 방해와 벽보 철거 요구 ▲이른바 ‘전자계시판 운영지침’ 등을 통한 사내 전산망 홍

보 활동 방해와 게시글 삭제 ▲조합 사무실 앞 CCTV 설치 ▲기자들에 대한 조합 집행부 접촉 사실 보고 지시 등 조합 활동 감시행위 ▲근로시간 면제제(타임오프) 미부여, 노동조합간 차별 등

03 단체교섭 거부·해태

2013년 노사간 단체협약(단협) 해지 이후 4년째 무단협 상태 지속. 사측은 단체교섭 자리에서도 노보 내용과 해직자(박성

제 전 노조위원장)의 교섭위원 위촉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교섭 해태

04 반(反) 조합 고용 계약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불가입과 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경력직 사원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역,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 (예 : “경력직을 뽑을 때 지역도 고려했다”는 백종문

부사장의 ‘녹취록 파문’)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죄질 나쁜 사업주는 구속수사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돼있다. 노조활동 방해 등이 포착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시적 노조파괴 행위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또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장악 음모” MBC 사측과 자유한국당의 ‘판박이’ 비난 성명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된 지난달 29일 오후 MBC 경영진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이 고용노동부를 동원했다”는 등 황당한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그동안…(중략)…고성을 지르는 등 집단행동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는 식으로 본질과 무관한 흠집내기도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사실관계를 날조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사측은 당초 성명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상부지시’라고 말하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 부분을 삭제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겁박”이라며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MBC 사측 성명의 복사판이라 할 정도로 글의 전개와 표현들이 빼닮아 있다.

한국 언론 사상 최악의 노동탄압을 자행해온 MBC 경영진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구 집권 세력으로서 이같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묵인·방조한 공범이다. 감히 ‘언론자유’나 ‘공영방송 탄압’ 등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자들이다. 이제 자신들이 공모한 범죄

행각이 공권력으로 단죄될 위기에 몰리자, 후안무치한 마지막 저항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MBC 경영진과 자유한국당의 ‘이심전심’? <성명 비교>

- <MBC> “정치권력이 방송 장악,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다”
- <자유한국당>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겁박이다…고용노동부는 누구의 오더를 받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 <MBC> “(고용노동부의) 판단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권이 바뀐 것 하나 뿐이다”
-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다”
- <MBC> “…여권의 발언에 홍위병처럼 발맞춘 ‘언론노조의 경영진 끌어내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 <자유한국당>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자마자 MBC 노조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 <MBC>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빙자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춘천MBC도 특별근로감독 신청

노조 선거 방해, 지부장 중징계, 파업중 불법 대체인력 투입

송재우 사장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수사 촉구”

서울 MBC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된 지난달 29일 춘천MBC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이 신청됐다. 춘천지부는 이날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춘천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2월 송재우 사장은 지부장 선거기간 중 지부장 후보자에 대해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등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임금협상 조정 중지로 노동조합에 합법파업권이 부여되자 최현영 지부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감

행했다. 지난해 사측이 개최한 ‘광역화 설명회’ 등에 조합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체행동을 유도했다는 게 주요 징계 사유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상당한 시일이 흐른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실제로는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로 징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다고 예시했다. 또한 사측은 이례적으로 지부장이 신청한 징계 재심도 수용하지 않았다.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이후에도 노조의 부분파업에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송재우 사장은 노

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끊임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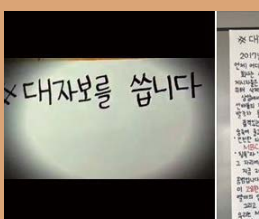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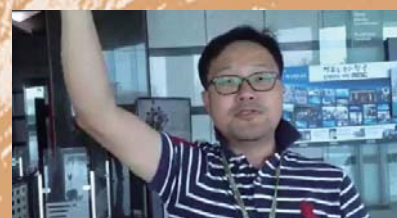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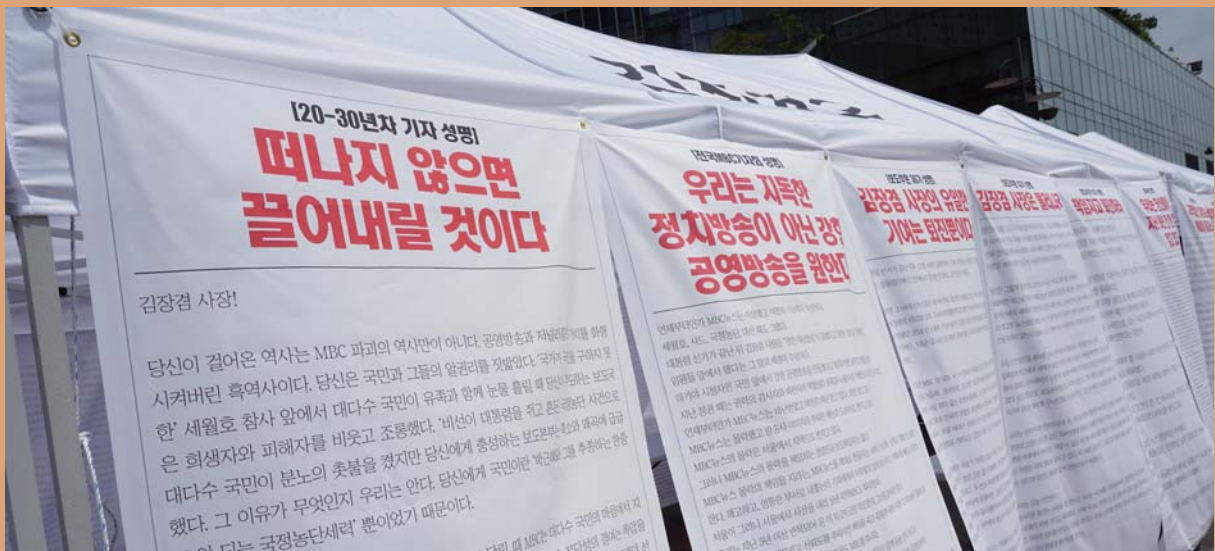


“김장겸은 물러나라!” 전국을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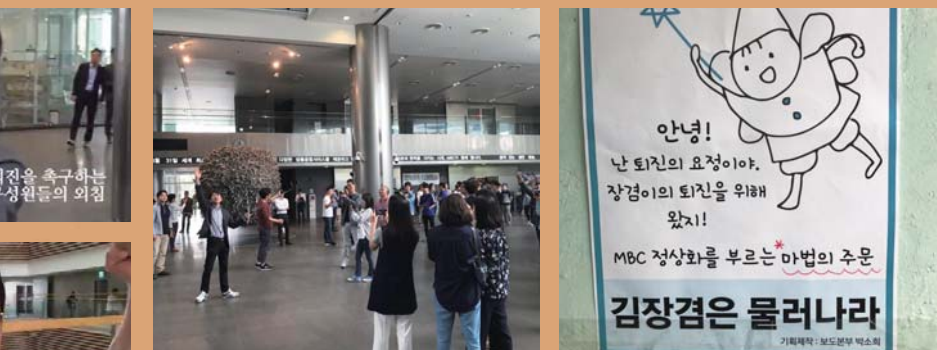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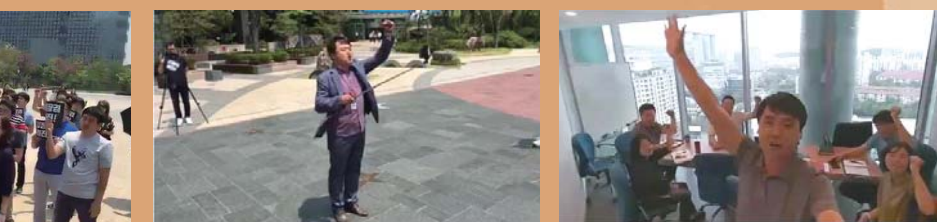
사내·외 기명 성명 70여장 봇물... 김민식發 “물러나라” 외침 릴레이

‘MBC 파괴’의 장본인 김장겸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회사 안팎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5월 콘텐츠제작국 PD 29명의 기명 성명을 필두로 70여 장의 성명서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MBC 구성원들은 부문, 사번, 직능단체, 지역 등을 매개로 한 사장 퇴진 성명에 이름을 올리며 결의를 다졌다. 한국PD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 한국 언론계를 대표하는 직능 단체들도 지지 성명으로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김장겸 경영진 퇴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상암동 사옥 곳곳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는 외침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5월30일 김민식 PD가 사내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처음 외친 뒤, MBC 구성원들이 릴레이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점심시간에는 사옥 로비와 야외 광장 등지에서 사원 100여 명이 모여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현장은 그때마다 페이스북 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지난달 9일 게시된 동영상은 약 5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흔드는 메아리



“물러나라” 요구에 ‘징계 위협’으로 화답하는 김장겸

김민식 PD 대기발령, 권성민 PD · 박소희 기자 경위서 제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사원들의 사장 퇴진 요구에 회사는 여지없이 징계의 칼날을 내보이며 위협하고 있다.

회사는 ‘김장겸 물러나라’를 사옥에서 외친 김민식 PD에 대해 지난달 14일 1개월간의 자택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PD는 사옥 내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장겸 사장이 퇴진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김장겸은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회사는 이 행동이 다른 동료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조정실 근무 중 방송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까지 가정해 징계성 발령을 내린 것이다. 동료들은 오히려

김 PD의 뒤를 따라 ‘물러나라 퍼포먼스’를 이어나갔다. 김민식 PD는 대기발령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에서 기각됐다.

사측은 또 외부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 한 권성민 PD, 회사 주변에 ‘김장겸 퇴진 요정’ 포스터를 부착한 박소희 기자 등에게는 각각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경위서 제출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의 사전 절차로 진행된다.

권성민 PD는 지난달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약 10분간 인터뷰했다. 앞서 발표된 MBC 예능PD 기명 성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최근 사내에 확산되고 있는 ‘사장 퇴진 요구’ 상황과 배경 등을 설명했다. 권 PD는 외부 인터뷰가 취업규

칙 제9조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임을 확인하고, 섭외를 받은 당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마친 뒤 인터뷰에 응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소희 기자는 회사 주변 곳곳에 ‘김장겸 퇴진’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였다. 최근 온라인 상에 유행하는 그림을 패러디 한 포스터였다.

박 기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비를 들어 인쇄한 포스터 10여장을 회사 주변에 부착했다. 박 기자는 “지난 2012년 최장기 파업 이후 때로는 글로, 때로는 거리 시위로 회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왔다”며 “시청률, 신뢰도, 공정성 모두에서 실패한 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MBC 뉴스는 적폐의 보루가 되기로 선택했는가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을 몰아낸 국민의 열망은 지난 정권에서 막혀왔던 적폐 청산, 비정상의 정상화, 불합리에 대한 개혁 요구로 이어져 현실화되고 있다.

MBC 역시 이런 개혁의 대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망가져온 지난 9년의 암흑시대를 청산할 것을 시청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 이상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들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파면된 박근혜 세력이 임명한 김장겸 사장의 MBC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적폐 세력의 보루로 남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개혁과 정상화의 물결 속에서 MBC는 영성만 방과제를 두른 섬처럼 남아 있다. 뉴스는 MBC의 이런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장겸 사장 출범 후, MBC 뉴스는 사라진 것과 왜곡된 것 투성이었다. 시청자들의 관심과 신뢰가 더욱 사라졌다. 해야 할 뉴스가 사라졌다. 그 자리는 왜곡된 뉴스가 자리잡았고, 시청자들의 눈을 돌리려는 왜곡된 해법이 자리잡았다.

맥락을 왜곡하는 '사드 보고 누락' 보도

최근 <뉴스데스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사안은 이른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이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보고 누락의 실체를 취재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논란'으로 몰타기 하고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보고 누락 진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치부 (부장 김기현)의 리포트들만 정리한 것이다.



- ① “비공개 반입 충격.. 철저 진상 조사” / 5월 30일 조영익
- ② 예고된 반입.. 보고 놓고 '진실 게임' / 5월 30일 정동욱
- ③ “의도적 보고 누락”.. 추가 조사 예고 / 5월 31일 김천홍
- ④ “누락 지시 안했다”.. 군 개혁 '신호탄'? / 5월 31일 구경근
- ⑤ “철저한 진상 규명”.. “국면 전환 카드” / 5월 31일 장성호
- ⑥ 김관진 · 한민구 조사.. 철저 조사 의지 / 6월 1일 김천홍
- ⑦ ‘고의’였나 ‘오해’였나.. 국방 가열 / 6월 1일 윤지윤
- ⑧ 靑 의혹 제기.. 국방부 전면 반박 / 6월 1일 김재홍
- ⑨ ‘보고 누락’ 정리하고 미국 달래기 / 6월 5일 이재민

②번 기사는 “청와대 보고체계의 이상인지, 국방부의 잘못인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라고 전달했다. ⑤번 기사는 청와대를 탓

하는 야당의 주장을 전달하며 문제를 정치권 논란으로 변질시켰다. ⑦번 기사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으로 국방부를 옹호하자, ⑧번 기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보고누락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결론은 어땠나. ⑨번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의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심위원들은 “기사의 전반적인 흐름이 청와대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안 했고, 그래서 책임도 청와대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심위원은 ‘예고된 출입처 일정을 담당 기자가 보고하지 않아 취재가 누락됐는데, 이를 두고 담당 기자의 책임이 아니라 일정이 있는지 묻지 않은 부장의 책임’이라고 하면 수궁할 부장이 얼마나 되겠냐고 꼬집었다.

국방과 관련한 핵심적인 이슈이다.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척 하며 논란을 만들고, 실제로는 의도를 가지고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직무 유기일 뿐 아니라 매우 부적절한 개입이다.

일상화된 뉴스 사유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되자, 경제부 (부장 배선영)와 정치부 (부장 김기현)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 ⑩ 3년 임기 2달만에.. 차관 임명 의도는? / 정재윤
- ⑪ “전례 없는 꼼수” “방송 장악 의도” / 천현우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인 지난 4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김용수 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강행해 ‘알박기’ 논란이 일었을 때만 해도 <뉴스데스크>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했었다. 그러다가 새 정부에서 김용수 씨에 대한 인사를 내자 ‘방송 장악’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인사는 괜찮았지만, 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보도 태도이다.

이런 모습은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을 때에도 되풀이됐다. 6월 29일 <뉴스데스크>의 ‘특별근로감독’ 관련 기사들이다.

- ⑫ MBC 상대 유례없는 특별근로감독 / 전기영
- ⑬ 정권 바뀐 뒤 입장 바꾼 노동부 / 백연상
- ⑭ “언론 장악 의도”.. 야권 강력 비난 / 류병수



공식처럼 자리잡은 패턴이다. 현 MBC 경영진은 자신들의 이익이 달린 문제가 나오면 회사 이름으로 성명을 낸다. 뒤이어 정치권에서는 유독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논평을 낸다. 그러면 <뉴스데스크>는 관련 소식을 마치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인 양 정색을 하고 보도한다.

사회1부(부장 김소영)와 문화부(부장 김태래), 정치부(부장 김기현)가 리포트에 참여했다. ⑫번 기사는 스트레이트의 형식을 띄고 있고 ⑬번과 ⑭번은 <뉴스데스크>의 전매특허가 된 성명보도이다. 기사를 보면 필수적인 팩트-부당 해고, 부당 징계, 부당 전보, 노조 탄압, 불투명한 인사 고과 등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가게 된 배경-는 들어가 있지 않다. 대신 회사의 성명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충실히 전달한다.

정권이 바뀔 땐 특별근로감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비판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은 9년 동안 이어진 언론탄압의 당사자이다. 주요 방송사마다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고 부당하게 징계받고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속출했다. 이런 언론탄압을 바로잡아 달라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거부해왔다. 특별근로감독 거부와 착수 중 어느 쪽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인지는 이런 상황만 돌아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방송은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적시한 공공의 기준임과 동시에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 내부의 기준이기도 하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경영진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기사를 쓰는 모습은 언론이 아니다. 당해 사업자나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뉴스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현 경영진이 결탁하고 있다고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다.

MBC에서는 사라진 ‘6월 민주화 항쟁’

지난 6월 10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거대한 분기점이었던 1987년 6월 항쟁 30주년이었다. 오전 10시부터 기념식이 열렸고,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0년만이었다. KBS와 SBS 모두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하지만 MBC에서는 기념식 중계를 볼 수 없었다.

이런 기조는 메인 뉴스까지 이어졌다. 당일 KBS <뉴스9>는 기념식 소식 외에도 ‘6월 정신’을 계승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정리하는 등 모두 5개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SBS <8 뉴스>도 기념식 기사와 함께 당시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른바 ‘넥타이 부대’를 재조명하는 리포트를 방송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달랐다. 공식 기념식 소식만 리포트 단 하나로 처리했을 뿐이다.

또한 KBS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부터 최근의 촛불집회까지 민주화 30년을 되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 2부작을 방송했다. SBS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6월 항쟁 30주년- 거리의 사람들>이라는 아이템을 다뤘다. 하지만, 이미 알다시피 MBC는 PD가 제작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던 6.10 항쟁 다큐멘터리마저 제작을 중단시켰다. 다른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도 6월 항쟁을 다룬 아이템은 없었다.

단지 6월 10일 하루만 어떻게 넘어가보자는 단편적인 움직임이 아니

었던 것이다. 김장겸 체제 구축 후,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이 공영방송 MBC 안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뉴스데스크>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반미’ 색깔 씌우기 보도

사드 논란에 대해 미국 내 일부 비판 여론을 과장하고, 외신 보도를 입맛대로 해석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선이 중국 및 북한과 비슷하다는 분위기의 기사 편집으로 정부의 외교 방향이 반미로 비춰지게 만들어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할로 전락한 청문회 중계

<뉴스데스크>는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질의응답과 논쟁 중 자극적인 내용들만 발췌해 중계함으로써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인사검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파업 폄훼

비정규직 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한 파업의 취지는 불친절하게 소개한 채 학교의 급식 중단과 집회 현장 주변의 교통 불편을 강조했다.

본질은 외면...먹을 거리, 볼 거리 찾는 보도책임자들

이렇듯 MBC 뉴스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이유는 뻔하다. 한마디로 “해야 할 뉴스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뉴스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 보도국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도국은 <이브닝 뉴스>에 ‘지역 볼거리, 먹거리 관련 코너’를 신설했다. 지역사에 각 지역 특산 음식이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리포트를 제작해 송출하라고 공지하면서 밝힌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장께서는 요즘 우리 뉴스에 딱딱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각 지역의 유적이나 명소, 관광지를 소개하는 소프트한 코너를 만들어 보자는 게 기획 취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MBC 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MBC 뉴스의 경쟁력이 약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시청자 평가지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 MBC는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 면에서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꼴찌였다. 음식과 풍경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민실위원은 “회가 못먹을 정도로 상해 있는데도 횡집에서 회는 신경 안쓰고, 무채나 콘버터에 신경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실위원들은 지난 한 달의 뉴스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꼈다. 전과를 사유화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편파 보도를 일삼는 김장겸 체제는 민주화의 역사조차 제대로 기억하거나 전달하고 있지 않다. 6월 민주화 항쟁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올해, 국민들은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썼다. MBC 뉴스에는 이런 역사적 이해가 없다.

정상적인 공영방송사라면 보도국 수뇌부들이 자리를 걷고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넘어가고 있다. 자기 반성조차 전혀 없다. 뉴스의 정상화는 공영방송 경영진과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고영주-김장겸 체제의 퇴진 후에 가능하다.

방문진,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거부 '보도 파탄 총책' 김장겸 비호 위해 억지논리 총동원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 문화진흥회가 '2016년 MBC 경영평가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 방문진은 지난달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영평가 보고서의 평가 결과 승인과 공표 결의' 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방문진은 매년 MBC의 경영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한 해 동안의 경영 실적을 알리고 향후 회사 경영의 지표가 될 주요 자료이다. 보도, 시사, 편성·제작, 경영,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 방문진이 추천한 교수들이 한 분야씩을 담당한다.

구 여권 추천 이사들 보도·시사 비판에 반발

이번에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이 채택에 반대 한 부분은 보도·시사 분야였다. 평가를 맡은 강원대 김세은 교수는 MBC의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MBC의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제재는 지상파 3사 중 건수와 감점 모두 가장 많았고,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사유에 따른 제재가 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보도·시사 분야의 경영지침 이행 정도가 매우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100분 토론>에 대해서는 "일부 패널의

막말이나 편파적인 패널 선정이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패널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특히 "원만한 노사관계와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정립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MBC의 권력 감시 소홀' 지적, 수용할 수 없다"

보고서는 그간 MBC가 보여 온 고질적인 왜곡·편파·불공정 보도와 뉴스 사유화 등의 만행에 비하면 매우 점잖은 수준이다. 각종 평가 지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MBC의 공신력과 채널 이미지는 심각하게 추락했다. 그러나 방문진 구 여권 추천 이사들, 특히 김광동과 유의선 이사는 자신들이 비호하고 있는 김장겸 사장에 대한 맹목적 옹호에만 나섰다. 억지논리를 동원해 보고서를 흠집 내는 데에 급급했다. 김광동 이사는 "JTBC가 (MBC 보도의) 준거의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MBC가 권력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학자 출신의 유의선 이사는 "(보고서를) 김세은 교수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원래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며 동료 학자

를 향해 막말에 가까운 폄해를 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노사관계와 조직문화 정립 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 여권 이사들은 "보도·시사 부문이 아니라 경영 부문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경영평가보고서 채택하고 물러나야

이들이 갖은 이유를 대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보고서의 평가 대상이 된 2016년 보도·시사 분야의 책임자는 현 사장인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이다.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당연히 김장겸 사장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방문진 구 여권 이사들은 김장겸 비호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방문진은 지난 9년간 MBC 몰락의 공범이자 배후이다. 보도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뉴스 사유화가 되풀이됐지만, 방문진은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방문진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MBC의 경영평가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다. 방문진은 내일(6일) 이사회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한다. 방문진 이사들은 내일 이사회에서 반드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보고서에 적시된 MBC의 슬한 경영 실패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장 퇴진해야 할 것이다.

이용마 기자 캐유를 지원하는 응원계좌

하나은행 850-910016-27704
예금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